

〈자료〉

## 1933 - 1945년간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에서의 박사학위박탈\* \*\*

토마스 헨네

번역 崔秉祚\*\*\*

대단히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명예롭고, 최병조 교수의 주도로 마련된 초청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은 음성자료로써 제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933년 수권법(授權法)이 통과되기 전 독일제국의회(Reichstag)에서의 그 유명한 마지막 자유 연설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민주당 의원인 오토 벨스(Otto Wels)가 행한 것인데, 그는 자신이 속한 정당을 대변하여 출범하는 국가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거부를 피력하고 있다.

서두: 음성자료<sup>1)</sup>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반대파는 우리의 명예에 손대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언젠가 그 장본인들 자신에게 되돌아 갈 것이고, 이러한 세계적인 비극적 사건에 있어서 망실되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의 우리의

\* 이 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소속이며 현재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독일법을 강의 중인 토마스 헨네 교수가 2008년 3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는 교수집담회 “법과문화포럼”에서 발표한 것이다. 강연문을 그대로 살렸으나, 각주 18)만은 강연시의 별도 자료에서 본문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각주로 삽입한 것이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www.dhm.de/lemo/html/dokumente/wels (2007. 3. 3.).

신념입니다. 자유와 생명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명예는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방금 들었던 바와 같이 “자유와 생명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명예는 결코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이해되었던 명예, 즉 박사칭호의 “명예(Würde)”가 학위박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명예(Würde)”는 동시대의 박사학위취득선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나는 이 명예(Würde)가 나에게 부과하는 의무들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선서한다. 나의 학문연구와 나의 모든 품행(Lebensführung)에 있어서, 나는 오늘 수여받은 영예를 명예롭게(würdig) 유지하도록 힘쓸 것이다. [...]”

이러한 라이프치히대학의 1930년의 박사학위취득선서<sup>2)</sup>는 당시 아직도 “박사학위의 명예(Würdigkeit)”가 얼마나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즉 학위심사청구자에게는 단지 칭호만이 아니라 “명예(Würde)”도 수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박사학위박탈이 국가사회주의 시기의 창안물이 아니었고 “부적격(Unwürdigkeit)”이라는 일반조항도 이미 바이마르 시기의 법치국가 때 도입되었었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의 경우 제국말엽(1887-1917)에 총 6건의 박사학위박탈이 입증되는데, 대부분 재판에 의한 명예권 상실에 의한 것이었다.<sup>3)</sup>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시기의 박사학위박탈은 그 양과 질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라이프치히 법과대학에서만도 1933년에서 1945년간 최소한 73명의 남녀 법학도들이 박사칭호와 학위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라이프치히 법과대학은 2007년에 한 연구프로젝트를 시

2) 이것은 라이프치히대학 철학부의 박사학위선서문으로, “명예를 걸고 한 선서”로서 1930년의 것이다. Carsten Schreiber, Von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zum Reichssicherheitshauptamt. Leipziger Doktoranden zwischen Universität und Gegnerforschung, in: v. Hehl, Landesuniversität (Fn. 17), S. 263 ff. (287)에서 인용.

3) 그 중 한 건은 학장의 서한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Eduard Reinhard Bornefeld가 그의 박사학위논문이 자력에 의한 것이고 타인의 도움 없이 작성했다는 선서에 갈음한 확인(eidesstattliche Versicherung)을 고의로 허위로 한 것을 이유로 유책판결 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작하였는데, 그것은 필자가 주도하였고 그 중요한 성과가 이하에서 제시된다. 그 프로젝트는 동 법과대학의 결의<sup>4)</sup>와, 연방행정법원에서의 독일-이스라엘 법률가 협회의 2007년도 연례회의 중 기념행사의 개최 및 책의 출판을 하기로 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 I.

출발점이 된 것은 법과대학의 박사학위자 명부(Doktorbuch)였다.<sup>5)</sup> 해당자의 박사학위논문들은 라이프치히에 거의 완벽하게 전해진다-도서관들마저도 “정화”하는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조직된 “법학에서의 유대민족(1936년 10월)”이라는 학술대회에서의 악명 높은 주장은 그런 한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물론 東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몇 개의 박사학위논문 표지를 가지고 왔다.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에서만 1933년에서 1945년간-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대부분의 다른 대학교들의 사례들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박사학위 박탈 건수가 확인된다.<sup>6)</sup> 이미 이런 이유로 법학박사학위(Dr. jur.)의 박탈로 논의를 한정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미 라이프치히에서는 없어진 법과대학서류로 인하여, 법학박사과정 진학이 이미 초기단계에서 차단되었거나<sup>7)</sup> 1933년 이후에 박사학위 취득절차가 중단되었던 학생들은 조사될 수 없었다. 이렇게 한정된 박사학위박탈 피해자들의 집단-현재로는 73명이 알려졌다-은 매우 이질적인데, 그들의 이력을 보든 학위박탈의 사유를 보든 그러하다.

4) 이 소책자 XXX면.

5) Universitätsarchiv Leipzig, Jur.Fak. B I 02.

6) 예컨대 쾰른에서는 “단지” 8건, 튀빙겐에서는 약 10여건의 법학박사학위의 박탈이 국가사회주의 정권시기에 행해졌다.

7) 이 점에 있어서 독일독문학 분야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이 2007년 2월 16일에 명예박사를 수여하였던 Marcel Reich-Ranicki일 것이다. 베를린 대학(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zu Berlin)은 1938년 당시 학생이었던 Marcell Reich에게 유대인으로서 대학교 수학(입학)의 허가를 거부하였다.

## II. 1933년 당시의 여건

1933년에는 대학교원의 대다수는 라이프치히에서도 정치적으로 민족적·보수적(national-konservativ)이었고, 국가사회주의자들에게로의 정권이양에 빈번히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반면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유대주의는 대부분 무관심에 처해 있었다. 1933/34년은 법과대학에 세부적으로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수진의 변혁을 가져왔다. 1938년까지 대학교원의 거의 20%가 대학을 떠나야만 했다.<sup>8)</sup> 그것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sup>9)</sup>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은, 오래전부터 “박사학위 수여 학부(Promotionsfakultät)”<sup>10)</sup>였고 제국 전체 순위에서 제3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sup>11)</sup> 우선은 박사학위박탈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박사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배제도 아마 시간을 두고서 비로소 나타났을 것이다. (그 해의) 여름학기에는 아직 박사학위취득의 약 10%가 이

8) Siegfried Hoyer, Die Vertreibung jüdischer und demokratischer Hochschullehrer von der Universität Leipzig 1933 bis 1938, in: Ephraim Carlebach Stiftung u.a. (Hrsg.), Antisemitismus in Sachsen im 19. und 20. Jahrhundert, Dresden 2004, S. 168 ff. (177); 또한 Michael Parak, Hochschule und Wissenschaft in zwei deutschen Diktaturen. Elitenaustausch an sächsischen Hochschulen 1933-1952, Köln 2004 (von Hoyer aaO. noch nicht berücksichtigt)도 참조.

9) “성공적인 신입교수의 임명이 감축된 교수정원을 만회하였다”라고 Bernd-Rüdiger Kern은 2000년도에 아래의 글에서 기술하였다. 同, Die Geschichte der Leipziger Juristenfakultät, in: Redaktionsbeilage des C.H. Beck-Verlages zum 63. Deutschen Juristentag 2000, S. 84-89 (hier 86). 이것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의아한 주장으로 평가되었다. Kern의 논문에 대한 상제는, Bernd Rüthers, Schwierigkeiten mit der Geschichte?, in: Juristenzeitung, Jg. 2001, S. 181 ff.; 이에 대한 Kern의 반론에 대해서는, ebd., S. 751 ff.; 또한 Nikolaus Eschen, “Erfolgreiche” Neuberufung, i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 47/2000, S. XXXI. 한편 Kern, Geschichte der Juristenfakultät (Fn. 50), S. 74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발견된다. “대학은 성공적인 신입교수의 임명을 통하여 1933년의 경미한 瀉血을 만회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었다.”

10) 예컨대 1933년 여름학기에만 법과대학에서 적어도 87명의 박사학위취득이 이루어졌는데, 주60에서 언급하고 있는 Koschaker의 저술을 참조. 또는 1885년부터 1906년까지는 아래의 진술이 타당하다. “라이프치히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학도들의 수(3200)는 모든 프로이센 대학의 법학 박사학위논문 수를 합친 것의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 (Jens Blecher, Leipziger Universitätsjubiläen. Konstituierende Elemente der geschriebenen Erfolgsgeschichte, in: ders. (Hrsg.), Universitäten und Jubiläen. Vom Nutzen historischer Archive, Leipzig 2004, S. 176 ff. (193 m.N.)).

11) 전체 대학과 관련하여, Hoyer, Vertreibung (Fn. 49), S. 180. 그러나 이것은 법과대학에도 타당할 것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베를린 대학과 뮌헨 대학이었다.

른바 “非아리아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sup>12)</sup> 국가사회주의당원 학생들이 “라이프치히 대학의 ‘정치적 정화’와 관련한 돌격대”를 조직하였지만,<sup>13)</sup> 그것은 분명히 법과대학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박사과정생들을 우선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박사학위심사규정에 관한 법과대학과 작센주 교육부와의 질질 끌던 협상도 아마 1935년 중반에 아직 한 유대인 여학생이 라이프치히 법과대학에서 학위취득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에 기여하였을 것이다—아마도 제국 전체에서 마지막 유대인 박사학위취득자로서 말이다.<sup>14)</sup>

### III. 1933—45년의 박사학위박탈 절차

학살과 추방이 있기 전에도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법률의 지원을 받는 차별이 존재하였다.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박탈은 그에 있어서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즉—시간적으로 동시적이고 마찬가지로 실효적이었던—규범에 얽매이지 않는恣意에 대한 보장의 환상(illusionäre Sicherheit)을 만들어 냈으로써 그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박사학위박탈은 전혀 주변적인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명백한 국사범죄(예컨대 “뮌 쿠데타”)와 범의 형식을 갖춘 권리박탈(예컨대 “직업공무원층 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이 병발(並發)했다는 사실은(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적절히 서술되고 분석될 수 있다. 多頭政的(polykratische) “同意에 기반한 독재(Zustimmungsdiktatur)”(Götz Aly)가 여기에서도 작동하였다.

1933년과 1945년간의 多頭政的 決定구조들과 본질적인 변화들은 이 주제에 있어서도 명백한데, 동시에 시민적 지도엘리트층의 自己動員이 나타난다. 이들은 바로—단순화시키는 전체주의이론(“총통이 모두 한 것이었다”)과는 반대로—자기 자신의 동력으로부터 행동하였다. 박사학위박탈은 동의독재에서 대학교들의 자기 확일화(Selbstgleichschaltung)를 반영한다.<sup>15)</sup>

12) Hauptstaatsarchiv Dresden, HStA 11125, 10044/2, Bl. 49; Hoyer, Vertreibung (Fn. 49), S. 179의 경우에도 언급된다.

13) Hoyer, Vertreibung (Fn. 49), S. 170.

14) 그 대신에 전에는 Erwin Scheftelowitz라는 이름도 거론되었다(Himmelman, Jubiläum [Fn. 11]).

박사학위박탈 중 많은 수가 국외이주의 결과였고, 이러한 국외이주들은 연소한 박사과정생들의 대단치 않은 지위로 인하여 대부분 1933년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사학위박탈은 1933년부터 1945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 박사학위박탈자 수

1933년	: 1 (명예권 상실)
1934년	: 0
1935년	: 1 (나치 특별재판소의 판결)
1936년	: 1 (명예권 상실) 2 (결정)
1937년	: 2 (명예권 상실) 4 (결정)
1938년	: 2 (명예권 상실) 13 (결정)
1939년	: 1 (독일 국적의 박탈) 13 (결정)
1940년	: 18 (결정)
1941년	: 1 (교육부장관령에 의하여) 6 (결정)
1942년	: 5 (결정)
1943년	: 2 (결정)
1944년	: 1 (명예권 상실)

즉 전체 박사학위박탈의 거의 2/3에 이르는 건수가<sup>16)</sup> 1938년과 1940년 사이에<sup>17)</sup> 이루어졌다.<sup>18)</sup>

15) 이에 대하여 개관한 논문으로 Jens Blecher, Depromotionsverfahren an der Universität Leipzig als Instrumente politischer und rassenideologischer Repression, in: Stephan Wendehorst (Hrsg.), Bausteine einer jüdischen Geschichte der Universität Leipzig, Leipzig 2006, S. 591 ff.도 참조.

16) 73건 중 4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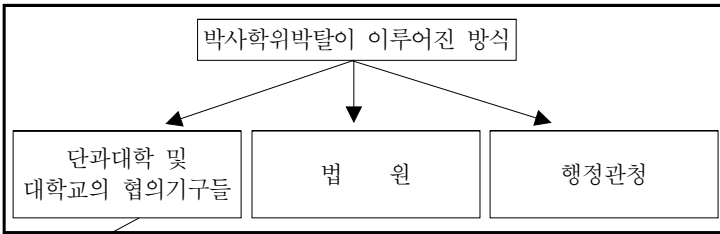
17) 이는 1933년에서 1945년간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의 박사학위박탈절차의 일반적인 분포와 일치한다. Blecher, Depromotionsverfahren (Fn. 62), S. 602 참조. 마찬가지로 이

학위박탈은 이미 오래 전에 받은 박사학위와도 결부되었는데,<sup>19)</sup> 그러나 밝혀진 한에 있어서 死後 박탈은 아니었다. 따라서 박사학위박탈은 우선적으로 그 저작에 대해서가 아니라 박사학위칭호를 가진 자를 겨냥하였다—이는 왜 박사학위는 문이 제거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다. 그런데 박사학위박탈은 라이프치히에서 분명히 교수진 내부에서의 권력다툼에도 기여하였다. 왜냐하면 심지어 1933년과 1937년 사이에 종결된 6개의 학위절차가 박사학위박탈에 의하여 좌절되었고 그로써 지도교수들도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학위박탈은 해당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sup>20)</sup> 특히 그들이 국외

기간에 박사학위박탈의 누적은 다른 단과대학들에서도 있었다. 예컨대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에 대하여는, Werner Moritz, Die Aberkennung des Dokortitels an der Universität Heidelberg während der NS-Zeit, in: Armin Kohnle (Hrsg.), Zwischen Wissenschaft und Politik, Stuttgart 2001, S. 540 ff. (545) 참조.

18)



— 법규 : 1938년 4월 1일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규정 제13조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 (1) 박사학위의 박탈은 제국교육부장관의 일반령(Erlasse) 내지 학위소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에 관해 공포된 규정(Verordnungen)과 명령(Erlasse)을 근거로 행한다.
- (2) 이에 의하여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박사학위는 박탈될 수 있다.
  - a) 학위를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나 학위수여에 대한 중요한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인정된 경우
  - b) 학위소지자가 학위의 수여에 부적격(unwürdig)하였다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
  - c) 학위소지자가 이후의 행동에 의하여 독일학위를 소지하는데 부적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3) 1933년 7월 14일자 시민권의 철회와 독일국적의 박탈에 관한 제국법률(RGBI. I S. 480) 제2조에 의하여 독일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선언된 자는 모든 경우 독일 학위에 부적격한 것으로 입증된다.

19) 박사학위박탈자 명단 중에 가장 오래된 학위논문은 Nathan Rosenberg가 1893년에 제출한 것이다.

20) 이에 대하여는 Curt Graf와 Max Friedlaender에 대한, 이 책 S. xxx ff. und S. xxx ff.

이주자로서 외국에 있던 경우에 그러하였다.<sup>21)</sup> 따라서 배제는 해당주무부서의 자기확인을 목표로 하였고, 그들의 단체를 인적으로 “정화”하고 대학공동체를 “민족공동체”의 기준과 일치하게 구성하려는 그들의 필요성에 우선적으로 기여하였다.<sup>22)</sup> 박사학위박탈이 매우 강하게 대학 내부를 향했다는 것은 박사학위자명부에 학위박탈기재를 열렬히 그리고 행정적으로 엄밀하게 실행했다는 사실도 증명한다—학위자명부란 대학외부 공개용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내부에서의 급진화되어간 자기동원에 있어서도 제국의 공공기구들과 대학교의 직위엘리트(Funktionseelite)는 그들의 배제조치가 외관상 법의 형식을 지니도록 고수하였다. 쾰른의 경우 심지어 “박사학위박탈 職印”의 존재가 입증되고 있다.<sup>23)</sup>

의 간단한 전기들에서의 지적을 참조.

- 21) Blecher/Wiemers, *Graduierungen* (Fn. 15), S. 679가 서술하듯이 해당자들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불신(Im Ausland Argwohn)”을 유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후순위의 목표였을 것이다.
- 22) 반면에 사건으로는—어쨌든 이곳에서 고찰된 법학박사칭호의 경우—Blecher/Wiemers, aaO.에서 거시(舉示)하고 있는 박사학위박탈에 대한 다른 이유들도 후순위였다. 즉 “학문적 공중 속에서의 동등한 사회적 담론”으로부터의 배제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1930년대에 박사칭호를 가지고서는 사실상 대학에의 임용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Blecher/Wiemers가 박사학위박탈의 또 다른 동기로 언급하고 있는, 직업의 미래를 어렵게 하려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고찰되고 있는 법학도들의 경우에는 증명될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법률가의 경우—의사의 경우와는 달리—직업행사가 박사칭호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Blecher/Wiemers가 결론적으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다른 대학졸업자들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박탈 사실이 더 널리 알려졌어야만 했었을 것이다. Chroust, *Verfolgung* (Fn. 28), S. 20ff.에서는 “박사학위 박탈에 있어서의 의도”에 대한 상세한 고려가 발견되는데, 그 경우 사건으로는 과도하게 합리적으로 답습가능한 “의도”가 탐색되었고, 게다가 당사자들이 빈번히 겪었던 모든 괴롭힘 중에서 박사학위박탈은—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가 알았다고 할 경우—대부분 또한 그들의 관점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침해였다는 사실이 지나치게 적게 고려되고 있다. Chroust가 명명하는 바 “박사학위박탈의 효과”는, 위에서 근거를 댔듯이, 주동자(Akteure)이자 가해자(Täter)인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상징적인 배제로써 (민족)공동체로의 포함을 장려하고자 했다는 것으로부터 나타났다(Chroust aaO. S. 21에서 간략히 거론되었지만, 충분한 근거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의 상당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 23) Margit Szöllösi-Janse/Andreas Freitäger, “Doktorgrad entzogen!”. *Aberkennungen akademischer Titel an der Universität Köln 1933 bis 1945*, Nümbrecht 2005, S. 74 (Photo).



베른트 뤼터스(Bernd Rütters)가 일찍이 기술하였던<sup>24)</sup> 저 “무제한적 해석”은 이 영역에 있어서도 “급진화의 축적(kumulative Radikalisierung)”으로 초래하였다. 즉 “실무는 자기동원으로 열려진 자유재량 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준수가 지속적인 준엄화에 의해서만 확고히 될 수 있었던 법규정들의 축적에 있어서 급진화되었다.”<sup>25)</sup>

따라서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로 소급되는 규범국가(Normenstaat)와 조치국가(Maßnahmestaat)간의 준별은 낱아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는) 국가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법을 다른 법과 준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26)</sup> 저 부분적으로 상이한—충칭하여 “국가사회주의적”이라고 지칭되는—법관님들의 혼재상태가 모든 법에 만연한 현상은 앞서 제시한 준별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대신: “민족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은 권리박탈과 그 다음 국외이주 또는 살해를 의미하였다. 대학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은<sup>27)</sup> 명예박탈에 의한 권리박탈을 의미하였다.

#### IV.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박사학위박탈에 대한 조치들

1945년 이후 박사학위박탈에 대한 회복행위(*actus contrarius*)는 법적 관점에서 명료하지 않았다. 학위박탈의 무효선언이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의 취소 또는 철회? 아니면 증서의 갱신?<sup>28)</sup> 아니면 개별사례에 있어서 박사칭호의 박탈

24) Bernd Rütters, Die unbegrenzte Auslegung. Zum Wandel der Privatrechtsordnung im Nationalsozialismus, 1. Aufl. Tübingen 1968; 6. Aufl. ebd. 2005.

25) Bernd Weisbrod, Einführung zur Ausstellungseröffnung in der Niedersächsischen Staats- und Universitätsbibliothek Göttingen, 29.10.2004, [www.uni-goettingen.de/de/sh/19168.html](http://www.uni-goettingen.de/de/sh/19168.html) (2007. 3. 3.).

26) 여기에서 거론된 문제점이 박사학위박탈의 취급에 대해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Thomas König, Aberkennungen des akademischen Grades wegen Kerkerstrafen. Zur Problematik und Kontinuität politischer Justiz des Nationalsozialismus, in: Posch/Stadler, Nichtigerklärung (Fn. 8), S. 51 ff.도 참조.

27) 이러한 측면은 Szöllösi-Janse/Freitäger, “Doktorgrad entzogen!” (Fn. 81), S. 33에서도 강조한다.

이 이후에도 심사를 견뎠는가?<sup>29)</sup> 거의 언제나 법과대학들은 당사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치를 취하였는데, 박사학위규정의 명시적 규범을 뛰어넘어 결정해야만 했다.<sup>30)</sup>

리온 포이히트방어(Lion Feuchtwanger) 박사, 토마스 만(Thomas Mann) 명예박사 그리고 국적박탈의 결과 1933년 이후 그들의 박사칭호 및 그와-동시대적으로-결부된 박사학위를 상실하였던 많은 다른 국외이주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학위박탈의 집단적 취소는 서독에서 개별적으로는 무엇보다도 1940년대 후반 그리고 1960년대에 행해졌다.<sup>31)</sup>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지난세기의 말에서야 이루어졌다-그래서 거의 모든 해당자의 사후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제부터는 상징적인 조치의 차원에 그치게 된다.<sup>32)</sup>

28) 문헌전거는 Hans-Peter Haferkamp, Doktorgradentziehungen wegen “Unwürdigkeit“ – Zur Aufarbeitung und Weiterverwendung des Gesetzes über die Führung akademischer Grade vom 7. Juni 1939 an der Universität Köln nach 1945, S. 2, 그지 online: [www.uni-koeln.de/uni/images/aktuell\\_rede\\_121205\\_haferkamp.pdf](http://www.uni-koeln.de/uni/images/aktuell_rede_121205_haferkamp.pdf) (2007. 3. 3.) 참조.

29) 技術史家 프란츠 펠트하우스(Franz Feldhaus)에 대하여 증빙됨: 1924년 아헨에서 명예박사, 1936년 학위박탈, 이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이론이 분분한 Feldhaus는 1945년 이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무위에 그침([http://de.wikipedia.org/wiki/Franz\\_Feldhaus](http://de.wikipedia.org/wiki/Franz_Feldhaus) (2007. 2. 3.) 참조).

30)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요약한 것으로는 1945년 이후 쾰른 대학 실무를 소재로 한 Haferkamp, Doktorgradentziehungen (Fn. 22).

31) 마르부르크 대학과 기센 대학이 이미 1965년과 1967년 국가사회주의 정권시기의 박사학위박탈에 대하여 실로 포괄적인 무효를 확인한 것은 예외에 속하였다(언급된 것: Thomas Röbbke, DIE ZEIT v. 27.7.2006, [www.zeit.de/2006/31/C-Doktorgradentziehung](http://www.zeit.de/2006/31/C-Doktorgradentziehung) (2007. 3. 3.); 기센 대학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13일자 기센대학 홍보자료집(Presse-dienst) Nr. 29/V1-V19/idw (2007. 3. 3.)과 상제는 Michael Breitbach, Das Amt des Universitätsrichters an der Universität Gießen im 19. und 20. Jahrhundert. Zugleich ein Beitrag zu den Doktorentziehungsverfahren zwischen 1933 und 1945, in: Archiv für hessische Geschichte und Altertumskunde, Neue Folge 59 (2001), S. 267 ff. (290 mit Fn. 111); 마르부르크에 대하여는 또한 Margret Lemberg의 “... eines deutschen akademischen Grades unwürdig”. Die Entziehung des Dokortitels an der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1933-1945, Marburg 2002, S. 81 ff. 요약된 개관은 Martina Elschenbroich가 Tagungsbericht von Wolfgang Müller zu einer Archivar-Tagung im Jahr 2000 ([www.archive.nrw.de/archivar/2000-04/A21.htm](http://www.archive.nrw.de/archivar/2000-04/A21.htm) (2007. 3. 3.)에서 제공한다).

32) 동독(DDR)의 시기 동안 국가사회주의 정권 때의 박사학위박탈에 대학들이 어떻게 반

라이프치히 해당자의 다수도 그들의 국외이주를 이유로 박사학위가 박탈되었던 것이므로, 따라서 이미 그 전에 더 이상 독일 내에서 학문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러한 부류의 대다수는 그들의 박사학위박탈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텐데, 이 사실은 외국으로부터는 제국공보를 읽는 경우에만 알 수 있었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1945년 전이나 후나 박사칭호를 지니고 있었고, 1945년 이후에도 그들에게 아무도 당시의 박사학위박탈 사실을 들이대거나 그것에 대하여 지적조차 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해당자 중 이러한 부류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부분 그랬을 것이다. 1945년 이후에 박사학위박탈 사실을 알게 되었던 자는 암묵적으로 그 무효를 전제하였다. 라드부르흐의 공식이 주효하였다.

박사칭호 소지자의 (불)명예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물론-박사칭호의 일반적인 의미변천과 함께-최근에 최소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변화하였다. “명예”는 그저 대단히 사소한 정도로만 박사칭호의 구성부분일 따름이다.

그러나 1933년 이후의 시기에 대하여 오토 웰스(Otto Wels)는, 본 강연의 시작 때 들었던 그의 연설로써 (다음과 같은) 타당한 어휘를 제공하였다. 박사학위박탈은 또한 해당자들의 명예를 겨누었고, 그들을 대학“공동체”에, 따라서 “민족공동체”에 속하기에 “부적격(unwürdig)”한 것으로 선언하였다. 최소한 앞서 언급한 라이프치히 법학 박사과정생 73명중 5명은 국가사회주의 정권에 의하여 살해당하였고, 8명은 적어도 한시적으로 수용되거나 감금되었다. 비교적 많은 수가 망명길에 올랐고, 거의 아무도 다시는 독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학문 엘리트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의 배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했던 바인데-박사학위박탈이라는 소재로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기능메커니즘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바라건대, 첫째로는 교훈적이고, 둘째로는 명예박탈을 어쨌든 사후적으로 또 어쨌든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Die Aberkennung von Doktorgraden an der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1933-1945 Überblick zu den Ergebnissen des Projekts\*

Thomas Henne\*\*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für die ehrenvolle und von Prof. Choe initiierte Einladung, vor Ihnen einen Vortrag halten zu können, bedanke ich mich. Ich möchte mit einem kurzen Tondokument beginnen; es ist ein Auszug aus der berühmten letzten freien Rede im deutschen Reichstag, bevor 1933 das Ermächtigungsgesetz verabschiedet wurde. Es spricht der sozialdemokratische Abgeordnete Otto Wels, der für seine Fraktion die Ablehnung der beginnenden NS-Herrschaft begründet:

Einleitung: Tondokument<sup>1)</sup>

[Wir sind wehrlos. Wehrlos ist aber nicht ehrlos. Gewiß, die Gegner wollen uns an die Ehre. Daran ist kein Zweifel. Aber daß dieser Versuch der Ehrabschneidung einmal auf die Urheber selbst zurückfallen wird, daß es nicht unsere Ehre ist, die bei dieser Welttragödie zugrunde geht, das ist unser Glaube bis zum letzten Atemzug. Freiheit und Leben kann man uns nehmen, die Ehre nicht.]

---

\* This is the text of the speech given on March 5, 2008 in the “Forum Law and Culture” at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Only the footnote 18) showing the institutional and legal mechanism of the deprivation of the doctorate is cut off from the separate paper of these which otherwise summarizes the speech, and inserted as a footnote by the editor.

\*\* DAAD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for German Law Priv.-Doz. Dr., LL.M. (Berkeley),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kyo.

1) [www.dhm.de/lemo/html/dokumente/wels](http://www.dhm.de/lemo/html/dokumente/wels) (03.03.2007).

Wie Sie gehört haben: „Freiheit und Leben kann man uns nehmen, die Ehre nicht“. Doch auf die damals so verstandene Ehre, die „Würde“, des Dr.-Titels zielten die Depromotionen.

Diese „Würde“ kam im zeitgenössischen Promotionseid zum Ausdruck:

„[...] gelobe ich, die Pflichten, die mir diese Würde auferlegt, treu zu erfüllen. In meiner wissenschaftlichen Arbeit und in meiner ganzen Lebensführung werde ich bestrebt sein, der heute empfangenen Auszeichnung **würdig** zu bleiben. [...]“

Dieser Leipziger Promotionseid von 1930<sup>2)</sup> belegt, welche starke Stellung die „Würdigkeit“ auch noch in dieser Zeit hatte, wie also dem Bewerber eine „Würde“ und nicht nur ein Titel verliehen wurde. Dazu paßt, daß Depromotionen keine Erfindung der NS-Zeit waren, und auch die Generalklausel der „Unwürdigkeit“ schon im Rechtsstaat der Weimarer Zeit eingeführt worden war. Belegt sind für die Leipziger Juristenfakultät insgesamt 6 Depromotionen im ausgehenden Kaiserreich (1887-1917), meist durch gerichtlich angeordneten Verlust der Ehrenrechte.<sup>3)</sup> Die Quantität und Qualität der Depromotionen in der NS-Zeit war aber neu und einzigartig. Allein an der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haben mindestens **73** Juristinnen und Juristen zwischen 1933 und 1945 ihren Dokortitel, ihre Doktorwürde verloren.

Zu diesen Vorgängen hat die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im Jahr 2007 ein Forschungsprojekt initiiert, das ich geleitet habe und dessen wichtigste

---

<sup>2)</sup> Hier die Fassung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als „Ehrenwörtliche Erklärung“ belegt für 1930. Zitiert nach Carsten Schreiber, Von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zum Reichssicherheitshauptamt. Leipziger Doktoranden zwischen Universität und Gegnerforschung, in: v. Hehl, Landesuniversität (Fn. 17), S. 263 ff. (287).

<sup>3)</sup> Eine Aberkennung erfolgte durch einen Brief des Dekans, nachdem Eduard Reinhard Bornefeld wegen wissentlich falscher Abgabe der eidesstattlichen Versicherung, die Dissertation selbstständig und ohne fremde Beihilfe gefertigt zu haben, verurteilt worden war.

Ergebnisse im Folgenden vorgestellt werden. Das Projekt führte zu einem Fakultätsbeschuß,<sup>4)</sup> einem Festakt im Rahmen der Jahrestagung 2007 der Deutsch-Israelischen Juristenvereinigung im Bundesverwaltungsgericht und zu einer Buchpublikation.

## I.

Ausgangspunkt war das Doktorbuch der Juristenfakultät.<sup>5)</sup> Und die Dissertationen der Betroffenen sind in Leipzig nahezu vollständig überliefert—der berüchtigte Aufruf auf der von Carl Schmitt organisierten Tagung „Das Judentum in der Rechtswissenschaft“ (Oktober 1936), auch die Bibliotheken zu „reinigen“, blieb insoweit ungehört. Auch natürlich in Tokyo; ich habe einige Titelblätter der Disserationen mitgebracht.

Allein für die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sind von 1933-45 so viele Depromotionen zu verzeichnen wie—soweit bislang bekannt—an den meisten der anderen Universitäten jeweils insgesamt.<sup>6)</sup> Schon deshalb mußte eine Beschränkung auf die Entziehung des Dr. jur. erfolgen. Und bereits wegen der in Leipzig fehlenden Fakultätsakten konnten jene Studierenden nicht ermittelt werden, denen der Weg zum Dr. jur. schon in einem frühen Stadium versperrt wurde<sup>7)</sup> oder deren Promotionsverfahren nach 1933 abgebrochen wurden. Die damit eingegrenzte Gruppe der Depromovierten—zur Zeit sind 73 bekannt—ist sehr heterogen, sowohl im Hinblick auf ihre Lebensläufe als auch mit Blick auf

---

4) In dieser Broschüre S. xxx.

5) Universitätsarchiv Leipzig, Jur.Fak. B I 02.

6) Beispielsweise wurden in Köln „nur“ 8, in Tübingen etwas über 10 Aberkennungen juristischer Doktorgade während der NS-Zeit vorgenommen.

7) Für das Fach Germanistik ist insoweit der wohl bekannteste „Fall“ Marcel Reich-Ranicki, dem die Humbolt-Universität Berlin am 16.2.2007 einen Dr. h.c. verliehen hat. Di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zu Berlin hatte 1938 dem Studenten Marcelli Reich als Juden die Zulassung zum Studium verweigert.

die Anlässe für die Depromotion.

## II. Die Ausgangslage 1933

1933 war die Mehrheit der Hochschullehrer auch in Leipzig politisch national-konservativ und knüpfte an die Machtübergabe an die Nationalsozialisten häufig Hoffnungen, während der Antisemitismus meist auf Gleichgültigkeit stieß, wenn man nicht einzelnen Betroffenen nahe stand. Die Jahre 1933/34 brachten an der Juristenfakultät eine im Detail noch wenig erforschte Umgestaltung der Fakultät; bis 1938 mußten fast 20 % der Hochschullehrer ausscheiden.<sup>8)</sup> Die dadurch neu zusammengesetzte<sup>9)</sup>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seit langem eine „Promotionsfakultät“<sup>10)</sup> und im reichsweiten „Ranking“ auf Platz 3,<sup>11)</sup> kümmerte

<sup>8)</sup> Siegfried Hoyer, Die Vertreibung jüdischer und demokratischer Hochschullehrer von der Universität Leipzig 1933 bis 1938, in: Ephraim Carlebach Stiftung u.a. (Hrsg.), Antisemitismus in Sachsen im 19. und 20. Jahrhundert, Dresden 2004, S. 168 ff. (177); vgl. auch Michael Parak, Hochschule und Wissenschaft in zwei deutschen Diktaturen. Elitenaustausch an sächsischen Hochschulen 1933-1952, Köln 2004 (von Hoyer aaO. noch nicht berücksichtigt).

<sup>9)</sup> „Erfolgreiche Neuberufungen glichen die Verluste aus“, schrieb dazu im Jahre 2000 Bernd-Rüdiger Kern, Die Geschichte der Leipziger Juristenfakultät, in: Redaktionsbeilage des C.H. Beck-Verlages zum 63. Deutschen Juristentag 2000, S. 84-89 (hier 86). Dies ist auch unter Juristen weitestgehend als befremdliche These gewertet worden. Zu Kerns Beitrag ausführlich Bernd Rütters, Schwierigkeiten mit der Geschichte?, in: Juristenzeitung, Jg. 2001, S. 181 ff.; die Entgegnung Kerns ebd., S. 751 ff.; vgl. auch Nikolaus Eschen, „Erfolgreiche“ Neuberufung, i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 47/2000, S. XXXI. Bei Kern, Geschichte der Juristenfakultät (Fn. 50), S. 74 findet sich die These: „Den geringen Aderlaß des Jahre 1933 konnte die Fakultät durch erfolgreiche Neuberufungen mehr als ausgleichen.“

<sup>10)</sup> Beispielsweise erfolgten alleine im Sommersemester 1933 nicht weniger als 87 Promotionen an der Juristenfakultät, vgl. das in Fn. 60 angeführte Schreiben von Koschaker. Oder: Für die Jahre von 1885 bis 1906 gilt: „Die Zahl der in Leipzig promovierten Juristen (3200) war fast doppelt so hoch wie die Zahl der juristischen Dissertationen aller preußischen Universitäten zusammen.“ (Jens Blecher, Leipziger Universitätsjubiläen. Konstituierende Elemente der geschriebenen Erfolgsgeschichte, in: ders. (Hrsg.), Universitäten und Jubiläen. Vom Nutzen historischer Archive, Leipzig 2004, S. 176 ff. (193 m.N.)).

sich aber vorerst noch kaum um Depromotionen. Auch bei den Promotionen setzte die Exklusion wohl erst mit Verzögerung ein; im Sommersemester erfolgten noch rund 10 % der Promotionen durch sog. „Nichtarier“.<sup>12)</sup> Zwar bildeten NS-Studenten „den Stoßtrupp bei den ‘politischen Säuberungen’ der Leipziger Universität“,<sup>13)</sup> das richtete sich aber offenbar nicht vorrangig gegen die in der Fakultät nicht so sehr präsenten Doktoranden.

Auch die langwierigen Verhandlungen der Juristenfakultät mit dem sächsischem Wissenschaftsministerium um eine neue Promotionsordnung haben vermutlich dazu beigetragen, daß noch Mitte 1935 eine jüdische Kandidatin an der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erfolgreich war—als vermutlich reichsweit letzte jüdische Promoventin.<sup>14)</sup>

### III. Die Depromotionsverfahren 1933–45

Vor Ermordung und Vertreibung stand im NS-System die legal gestützte Diskriminierung. Die Entrechtung durch bürokratische Verfahren war dabei systemstabilisierend, indem sie eine illusionäre Sicherheit vor der—zeitlich parallelen und ebenso effektiven—normfreien Willkür schuf. In dieser Perspektive ist die Depromotion also alles andere als eine Marginalie. Die Parallelität evidenter Staatsverbrechen (z.B. „Röhm-Putsch“) und der rechtsförmigen Entrechtung (z.B. durch das „Gesetz zur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kann zudem nur zusammengenommen angemessen beschrieben und analysiert werden. Die polykratische „Zustimmungsdiktatur“ (Götz Aly) funktionierte auch hier:

11) Hoyer, Vertreibung (Fn. 49), S. 180 mit Bezug auf die Gesamtuniversität. Dies dürfte aber auch für die Juristenfakultät zutreffen; am angesehensten waren Berlin und München.

12) Hauptstaatsarchiv Dresden, HStA 11125, 10044/2, Bl. 49; auch erwähnt bei Hoyer, Vertreibung (Fn. 49), S. 179.

13) Hoyer, Vertreibung (Fn. 49), S. 170.

14) Dafür war früher auch der Name von Erwin Scheftelowitz genannt worden (Himmelman, Jubiläum [Fn. 11]).



Die polykratischen Entscheidungsstrukturen und die wesentlichen Veränderungen zwischen 1933 und 1945 sind auch bei diesem Thema evident; zugleich zeigt sich die Selbstmobilisierung der bürgerlichen Führungselite, die eben—entgegen simplifizierenden Totalitarismustheorien („Der Führer war’s.“)—aus *eigenem* Antrieb handelte. Die Depromotionen spiegeln die Selbstgleichschaltung der Universitäten in der Zustimmungsdiktatur.<sup>15)</sup>

Weil ein großer Teil der Depromotionen eine Folge von Emigrationen war und diese Emigrationen wegen der nicht herausgehobenen Stellung der jungen Doktoranden meist nicht schon gleich nach 1933 erfolgten, sondern später, sind die Depromotionen nicht gleichmäßig über die Jahre von 1933-45 verteilt:

Anzahl der Depromotionen

- 1933 : 1 (Verlust der Ehrenrechte)
- 1934 : 0
- 1935 : 1 (Entscheidung des VolksGH)
- 1936 : 1 (Verlust der Ehrenrechte)  
2 (Beschluß)
- 1937 : 2 (Verlust der Ehrenrechte)  
4 (Beschluß)
- 1938 : 2 (Verlust der Ehrenrechte)  
13 (Beschluß)
- 1939 : 1 (Aberkennung dt. Staatsangeh.)  
13 (Beschluß)
- 1940 : 18 (Beschluß)
- 1941 : 1 (durch Erlaß des Reichserziehungsministers)  
6 (Beschluß)
- 1942 : 5 (Beschluß)
- 1943 : 2 (Beschluß)

---

<sup>15)</sup> Vgl. dazu auch der Überblicksaufsatz von Jens Blecher, Depromotionsverfahren an der Universität Leipzig als Instrumente politischer und rassenideologischer Repression, in: Stephan Wendehorst (Hrsg.), Bausteine einer jüdischen Geschichte der Universität Leipzig, Leipzig 2006, S. 591 ff.

1944 : 1 (Verlust der Ehrenrech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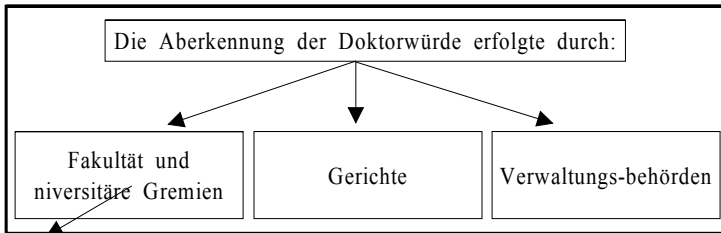
Es erfolgten also knapp 2/3 aller Depromotionen<sup>16)</sup> zwischen 1938 und 1940.<sup>17)18)</sup>

Die Aberkennungen knüpften auch an bereits weit zurückliegende Promotionen an,<sup>19)</sup> erfolgten aber soweit ersichtlich nicht posthum. Die Depromotion zielte

<sup>16)</sup> 47 von 73.

<sup>17)</sup> Das deckt sich mit der allgemeinen Verteilung der Depromotionsverfahren an der Universität Leipzig 1933-1945, vgl. Blecher, Depromotionsverfahren (Fn. 62), S. 602. Eine Häufung von Depromotionen ebenfalls in diesen Jahren gab es auch an anderen Fakultäten, z.B. vgl. für die Juristische Fakultät Heidelberg: Werner Moritz, Die Aberkennung des Dokortitels an der Universität Heidelberg während der NS-Zeit, in: Armin Kohnle (Hrsg.), Zwischen Wissenschaft und Politik, Stuttgart 2001, S. 540 ff. (545).

<sup>18)</sup>



Norm: § 13 der Promotionsordnung der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vom 01.04.1938 [Hervorhebungen durch den Verfasser]:

- (1) Die Entziehung des Doktorgrades erfolgt auf Grund der allgemeinen Erlasse des Reichserziehungsministers bzw. auf Grund des Gesetzes über die Führung akademischer Grade sowie der zu seiner Durchführung ergehenden Verordnungen und Erlasse.
- (2) Danach kann der Doktorgrad wieder entzogen werden:
  - a) wenn sich nachträglich herausstellt, daß er **durch Täuschung erworben** worden ist, oder wenn wesentliche Voraussetzungen für die Verleihung irrigerweise als gegeben angenommen worden sind;
  - b) wenn sich nachträglich herausstellt, daß der Inhaber der **Verleihung eines akademischen Grades unwürdig** war;
  - c) wenn der Inhaber sich durch sein **späteres Verhalten** des Tragens eines deutschen akademischen Grades **unwürdig erwiesen** hat.
- (3) Wer gemäß §2 des Reichsgesetzes über den Widerruf von Einbürgerungen und die Aberkennung der deutschen Staatsangehörigkeit vom 14.7.1933 (RGBl. I S.480) der deutschen Staatsangehörigkeit für verlustig erklärt worden ist, erweist sich in jedem Falle eines deutschen akademischen Grades unwürdig.

<sup>19)</sup> Die früheste Dissertation in der Liste der Depromovierten hat Nathan Rosenberg 1893

also vorrangig auf den Träger des Dr.-Titels und nicht auf sein *Werk*—was eine weitere Begründung dafür gibt, warum die Dissertationen nicht ausgesondert wurden. Die Depromotionen haben in Leipzig aber offenbar auch zu Machtkämpfen innerhalb der Fakultät gedient, denn es wurden sogar sechs zwischen 1933 und 1937 noch abgeschlossene Promotionsverfahren durch die Depromotionen konterkariert und damit auch die Doktorväter bloßgestellt.

In vielen Fällen wurde die Aberkennung nicht den Betroffenen bekanntgemacht,<sup>20)</sup> insbesondere wenn sie als Emigranten im Ausland waren.<sup>21)</sup> Die Exklusion zielte also auf eine Selbstbestätigung der dabei aktiven Instanzen und diente vorrangig deren Bedürfnis, ihre Korporation personell zu „reinigen“ und die universitäre Gemeinschaft in Übereinstimmung mit den Kriterien der „Volksgemeinschaft“ zu konstituieren.<sup>22)</sup> Daß sich die Depromotionen so stark nach innen

---

vorgelegt.

20) Vgl. dazu die Hinweis in den Kurzbiographien zu Curt Graf und Max Friedlaender, in diesem Band S. xxx ff. und S. xxx ff.

21) „Im Ausland Argwohn“ gegenüber den Betroffenen zu wecken, wie Blecher/Wiemers, Graduierungen (Fn. 15), S. 679, angeben, war daher wohl nur ein nachrangiges Ziel.

22) Nachrangig sind mE hingegen – jedenfalls bei den hier untersuchten juristischen Dr.-Titeln – auch die anderen von Blecher/Wiemers aaO. aufgeführten Gründe für die Depromotionen: Eine Exklusion vom „gleichberechtigten sozialen Diskurs in der wissenschaftlichen Öffentlichkeit“ war nicht nötig, da in den 1930er Jahren auch mit Dr.-Titel faktisch keine Aufnahme in die Fakultät mehr erfolgte. Eine Erschwerung der beruflichen Zukunft, die Blecher/Wiemers als weiteren Beweggrund für Depromotionen anführen, ist jedenfalls bei den hier untersuchten Juristen nicht belegbar, zumal die Berufsausübung bei Juristen – anders als bei Medizinern – nicht vom Dr.-Titel abhängt. Und um, wie Blecher/Wiemers abschließend anführen, als Mittel der Abschreckung gegenüber anderen Akademikern zu dienen, hätten die Depromotionen umfassender bekannt gemacht werden müssen. Bei Chroust, Verfolgung (Fn. 28) finden sich auf S. 20 ff. ausführliche Überlegungen zu den „Intentionen bei der Entziehung von Doktorgraden“, wobei aber mE zu stark nach rational nachvollziehbaren „Intentionen“ gesucht wird und außerdem zu wenig berücksichtigt wird, daß die Depromotion bei all den Drangsalierungen, die die Betroffenen häufig erfahren haben, meist auch aus deren Sicht ein vergleichsweise geringer Eingriff war – wenn sie davon überhaupt Kenntnis erhielten. Die „Effekte der Doktorgradentziehungen“, wie Chroust es nennt, ergaben sich, wie oben begründet, für die Akteure und Täter vor allem daraus, daß sie mit symbolischen Exklusionen die Inklusion in die (Volks-) Gemeinschaft fördern wollten (von Chroust aaO. S. 21 kurz angesprochen, aber nicht als hinreichende Begründung erachtet). Zu diesen Fragen, die in etlichen der oben

richteten, belegt auch der mit großem Engagement und bürokratisch genau vorgenommene Eintrag der Aberkennungen in das Doktorbuch—ein Dokument, das sich gerade nicht an die außeruniversitäre Öffentlichkeit richtete.

Auch in ihrer sich radikalierenden Selbstmobilisierung beharrten die Reichsinstitutionen und die universitäre Funktionseleite auf der scheinbaren Rechtsförmigkeit ihrer Exklusionen; für Köln ist sogar ein „Depromotionsstempel“ belegt.<sup>23)</sup>

Jene „unbegrenzte Auslegung“, die Bernd Rüthers erstmals beschrieben hat,<sup>24)</sup> führte auch bei diesem Gebiet zur „kumulativen Radikalisierung“: „Die Praxis radikalisierte sich in der Ausfüllung der zur Selbstmobilisierung eröffneten Ermessensspielräume wie in der Kumulation von Vorschriften, deren Einhaltung nur noch durch dauernde Verschärfung sicher gestellt werden konnte.“<sup>25)</sup>

Die auf Ernst Fraenkel zurückgehende Trennung zwischen Normen- und Maßnahmestaat ist also veraltet, man kann nicht das nationalsozialistisch beeinflusste Recht vom sonstigen Recht trennen.<sup>26)</sup> Die Durchdringung *allen* Rechts mit dem Gemengelage jener teilweise divergierenden Rechtsvorstellungen, die zusammenfassend als „nationalsozialistisch“ bezeichnet werden, kann bei jener Trennung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

erwähnten Publikationen leider kaum angesprochen werden, ist aber noch eine weitere Diskussion nötig.

23) Margit Szöllösi-Janse/Andreas Freitag, „Doktorgrad entzogen!“. Aberkennungen akademischer Titel an der Universität Köln 1933 bis 1945, Nümbrecht 2005, S. 74 (Photo).

24) Bernd Rüthers, *Die unbegrenzte Auslegung. Zum Wandel der Privatrechtsordnung im Nationalsozialismus*, 1. Aufl. Tübingen 1968; 6. Aufl. ebd. 2005.

25) Bernd Weisbrod, Einführung zur Ausstellungseröffnung in der Niedersächsischen Staats- und Universitätsbibliothek Göttingen, 29.10.2004, [www.uni-goettingen.de/de/sh/19168.html](http://www.uni-goettingen.de/de/sh/19168.html) (03.03.2007).

26) Zur Bedeutung der hier angesprochenen Problematik für den Umgang mit Depromotionen vgl. auch Thomas König, Aberkennungen des akademischen Grades wegen Kerkerstrafen. Zur Problematik und Kontinuität politischer Justiz des Nationalsozialismus, in: Posch/Stadler, *Nichtigerklärung* (Fn. 8), S. 51 ff.

Stattdessen: Die Vertreibung aus der „Volksgemeinschaft“ bedeutete Entrechtung und dann Emigration oder Ermordung. Die Vertreibung aus der universitären Gemeinschaft<sup>27)</sup> bedeutete Entrechtung durch Entwürdigung.

#### IV. Aktivitäten zu Depromotio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war der *actus contrarius* zu Depromotionen aus juristischer Sicht nicht ein-eindeutig: Sollte eine Nichtigkeitserklärung der Aberkennung erfolgen? Oder deren Rücknahme oder Widerruf?<sup>28)</sup> Oder eine Erneuerung der Urkunde? Oder hielt im Einzelfall die Aberkennung des Dr.-Titels auch im Nachhinein der Überprüfung stand?<sup>29)</sup> Fast immer wurden die Juristischen Fakultäten nur auf Antrag von Betroffenen oder Angehörigen aktiv und mußten jenseits der expliziten Normen der Promotionsordnungen entscheiden.<sup>30)</sup>

Ähnlich war es bei Dr. Lion Feuchtwanger, Dr. h.c. Thomas Mann und viele andere Emigranten, die als Folge ihrer Ausbürgerung nach 1933 ihre Dokortitel und die damit—zeitgenössisch—verbundene Doktorwürde verloren hatten.

Kollektive Rücknahmen der Aberkennungen erfolgten in Westdeutschland vereinzelt vor allem in den späten 1940er<sup>31)</sup> und in den 1960er Jahren,

---

<sup>27)</sup> Diesen Aspekt betonen auch Szöllösi-Janse/Freitäger, „Doktorgrad entzogen!“ (Fn. 81), S. 33.

<sup>28)</sup> Literaturbelege bei Hans-Peter Haferkamp, Doktorgradentziehungen wegen „Unwürdigkeit“ – Zur Aufarbeitung und Weiterverwendung des Gesetzes über die Führung akademischer Grade vom 7. Juni 1939 an der Universität Köln nach 1945, S. 2, nur online: [www.uni-koeln.de/uni/images/aktuell\\_rede\\_121205\\_haferkamp.pdf](http://www.uni-koeln.de/uni/images/aktuell_rede_121205_haferkamp.pdf) (03.03.2007).

<sup>29)</sup> Belegt für den Technikhistoriker Franz Feldhaus: 1924 Dr. h.c. in Aachen, Aberkennung 1936, wogegen der wissenschaftlich umstrittene Feldhaus nach 1945 vergeblich anging (vgl. [http://de.wikipedia.org/wiki/Franz\\_Feldhaus](http://de.wikipedia.org/wiki/Franz_Feldhaus) (02.03.2007)).

<sup>30)</sup> Zusammenfassend zu diesen Fragen anhand der Praxis der Universität Köln nach 1945: Haferkamp, Doktorgradentziehungen (Fn. 22).

umfassender aber erst zum Ende des vergangenen Jahrhunderts—und damit nach dem Tod nahezu aller Betroffener und folglich ab jetzt auf der Ebene symbolischer Akte.<sup>32)</sup>

Auch sind viele der in Leipzig Betroffenen aufgrund ihrer Emigration depromoviert worden, waren also schon zuvor nicht mehr in Deutschland in eine akademische Gemeinschaft eingebunden. Wohl die Mehrheit dieser Gruppe hat zudem von ihrer Depromotion nicht erfahren, da sie vom Ausland aus nur bei Lektüre des Reichsanzeigers ermittelbar gewesen wäre. Vor und nach 1945 führten sie daher den Dr.-Titel, und auch nach 1945 hat ihnen niemand die damaligen Depromotionen entgegengehalten oder sie auch nur darauf hingewiesen. Mindestens für diesen Teil der Betroffenen galt wohl überwiegend: Wer nach 1945 von den Depromotionen wußte, ging stillschweigend von deren Nichtigkeit aus. Die Radbruch-Formel wirkte.

Das heutige Verständnis von der (Un-) Würdigkeit eines Dr.-Titelträgers hat sich allerdings—zusammen mit einem allgemeinen Bedeutungswandel des Dr.-Titels—in neuerer Zeit jedenfall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

<sup>31)</sup> Es war wohl eine Ausnahme, daß die Universitäten Marburg und Gießen bereits 1965 und 1967 eine recht weitgehende Nichtigkeit von Depromotionen in der NS-Zeit feststellten (erwähnt bei Thomas Röbbke, DIE ZEIT v. 27.7.2006, [www.zeit.de/2006/31/C-Doktorgradentziehung](http://www.zeit.de/2006/31/C-Doktorgradentziehung) (03.03.2007); im Hinblick auf Gießen auch Pressedienst der Universität Gießen v. 13.2.2006, Nr. 29/V1-V19/idw (03.03.2007) und ausführlicher Michael Breitbach, Das Amt des Universitätsrichters an der Universität Gießen im 19. und 20. Jahrhundert. Zugleich ein Beitrag zu den Doktorentziehungsverfahren zwischen 1933 und 1945, in: Archiv für hessische Geschichte und Altertumskunde, Neue Folge 59 (2001), S. 267 ff. (290 mit Fn. 111); zu Marburg auch Margret Lemberg, „... eines deutschen akademischen Grades unwürdig“. Die Entziehung des Dokortitels an der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1933-1945, Marburg 2002, S. 81 ff. Einen kurzgefaßten Überblick gibt Martina Elschenbroich im Tagungsbericht von Wolfgang Müller zu einer Archivar-Tagung im Jahr 2000 ([www.archive.nrw.de/archivar/2000-04/A21.htm](http://www.archive.nrw.de/archivar/2000-04/A21.htm) (03.03.2007)).

<sup>32)</sup> Es ließ sich im Rahmen dieses Forschungsprojekts nicht ermitteln, wie während der Zeit der DDR die Universitäten auf die Depromotionen der NS-Zeit reagiert haben.

Eine „Würde“ ist nur noch zu einem sehr geringen Teil Bestandteil des Dr.-Titels.

Doch für die Zeit nach 1933 hatte Otto Wels mit seiner am Anfang meines Vortrags gehörten Rede das zutreffende Stichwort geliefert: Die Depromotionen zielten auch auf die Würde der Betroffenen, erklärten sie für „unwürdig“, der universitären „Gemeinschaft“ und damit der „Volksgemeinschaft“ anzugehören. Mindestens fünf der erwähnten 73 Leipziger Jura-Doktoranden wurden vom NS-Regime getötet, weitere acht befanden sich zumindest zeitweise in einem Lager oder in Haft. Relativ viele emigrierten, und kaum einer kehrte nach Deutschland zurück. Die Exklusion eines wesentlichen Teils der akademischen Elite blieb unumkehrbar. Doch diskutiert man—was ich Ihnen präsentieren wollte—die Funktionsmechanismen des NS-Regimes anhand der Doktorgradentziehungen, ist das, so hoffe ich, erstens lehrreich und hebt zweitens die Entwürdigung jedenfalls posthum und jedenfalls teilweise wieder auf.

Vielen Dank.